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주간 북한경제 동향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8년 11월17일(월)
통권1호(제1권 제16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로서 격주로 게재합니다.

남북, 양안에서 배우자

형식논리상 ‘분단’이란 현실과 ‘통일’이란 지향점에서 보면 양안(兩岸)이나 남북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면을 보면 상당히 다르다.

남북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서로 별개의 국호로 UN에 동시 가입해 있다. 국제법상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별개의 국가이다.

반면에 양안 중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 국가로 인정받은 곳은 중화인민공화국뿐이다. 중화민국은 현실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일 뿐이다. 이것은 남북보다 양안이 훨씬 더 정치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UN 동시가입에서 확인되듯 일시적이라더라도 남북은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안은 그럴 수 없다. 대만으로 본다면 중국은 ‘공산 반도’가 지배하는, 탈환해야 할 곳이다. 중국으로서는 대만은 ‘미해방지역’으로, 공략해야 할 곳일 뿐이다. 이러한 남북과 양안 간 관계 설정의 차이는 경제협력이란 차원으로 접근하면 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남북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한 경제협력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별로 없다.

그러나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양안은 원칙적으로 경제협력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하려면 별도의 원칙을 세워야 하고, 이 원칙에 서로 철저해야만 한다. 그 원칙이 바로 정경분리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시작된 양안 경제협력은 실용을 으뜸으로 하는 정경분리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외자기업법』 제정 전인 1983년 『대만 동포 투자에 관한 특별우대법』을 먼저 제정하여 대만 자본 유치에 열의를 보였다. 『외자기업법』 제정 후에는 외자에 부여한 혜택에 더해 대만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4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만동포 투자보호법』까지 제정했다. 『외자기업법』에 따라 외자기업은 중국 투자에 대한 독립회계를 해야 하지만 이 법으로 대만 투자기업은 독립회계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대만기업이 외자기업보다 좀 더 자유로운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렇듯 중국은 대만의 투자에

대한 보호와 보장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대만 기업 또한 정부의 규제와는 반대로 중국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이등회 정부 시절은 물론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정부 시절 대중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대만 기업은 버진아일랜드나 홍콩 등 제 3국을 거치는 우회투자 형식으로 중국 투자를 늘려왔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만 정부도 대만 독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정치적 갈등과 상관없이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2007년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 내 대만기업의 수는 7만여 개이며, 대만 상위 500대 제조업의 약 70%가 중국에 진출했다.

‘747’을 벤치마킹 하여 ‘633’을 내걸었던 마잉주는 선거 때부터 여러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비유됐다. 그 중 하나가 실용주의 주창이었다. 철저한 현실 인식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정치는 얼음을 녹이고, 경제는 불을 붙인다(政治融冰 經濟昇火)”는 마잉주의 실용주의는 현실성이 없는 대륙 수복을 공식 포기했다. 또한 갈수록 더해가는 대중 투자와 달리 속도를 줄이려는 계급용인(戒急用忍)이나 중국 대신 동남아 투자를 유도하려는 남방정책 대신 현실을 인정하고 양안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마잉주의 실용주의는 집권 6개월만인 지난 3일 장관급으로는 최초인 천원린(陳雲林)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회장의 대만 방문을 이끌어냈다. 마잉주 정부는 이를 통해 3통은 물론 양안이 공동기금을 만들자는 합의까지 이루어냈다. 평화협정 체결 이야기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이 지나간다.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는 양안보다 좋은 조건인 남북관계는 집권 9개월만에 사실상의 파국 상태이다.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폐쇄 직전이다. 37년만에 남북대화의 직통선도 단절됐다.

경제를 넘어 정치까지 화해와 협력으로 가는 마잉주식 실용주의와 갈수록 파국으로 치달아가는 이명박식 실용주의의 차이가 극명해지는 상황이다.

▶제16호 목 차

이주의 칼럼

이 정부의 ‘희망적 사고’ 2

이주의 주요 기사

北, 남북경협 창구 축소 개편 3

정세현 前장관 “개성공단 중단대책 세워야” 4

“남북통합지수 작년 최고, 남북협력 도약기” 5

개성공단 기업들, 대정부 건의 움직임 6

北군부 “12월1일부터 분계선통과 엄격 제한, 차단” 6

“남북경색 해법은 경제교류”<현대硏 설문> 7

北 개성공단 폐쇄때 국제신용 추락...외국인투자 완전 끊겨 9

시료채취 둘러싼 진실게임...北 노림수는 10

Military ties will not solve Korean issue 11

北의指定解除「中東のテロリスト支援」と米議会在報告書 11

추천논문 / 수산분야 남북협력 및 투자진출 방향 12

함께 보는 최근 북한단신 / 12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제4회 한겨레신문, 부산시, 한국토지공사
공동국제심포지움

▶주제 :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평화
번영

▶일시 : 2008년 11월 20일(목) 09:00 ~21(금)

▶장소 : 부산 노보텔엠베서더 그랜드볼룸

●평화재단 4주년 기념식 및 기념 심포지움

▶주제 :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 차기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제안한다

▶일시 : 2008년 11월 19일(수) 14:00

▶장소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20층)

●북한나무심기 기금마련 남북미술전

▶일시 : 2008년 11월 20(목) 15:00 ~26일(수)

▶장소 : 한국미술관(인사동)

이 주의 칼럼

이 정부의 ‘희망적 사고’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

이대근(경향신문사 정치·국제에디터)

이명박 정부의 말과 달리 선거 이후 오바마의 FTA반대 입장은 변함없고, 오바마는 이명박과 닮은 데가 없으며, 이명박의 대북정책이 오바마와 딱 맞지도 않는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이다. 그걸 모를 리 없는 정부가 ‘큰 틀’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다름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그런 접근을 하면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차이는 생각만큼 작지 않다. 협상태도를 조금 바꿨을 뿐인데 부시 1기와 부시 2기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달랐는지 우리는 잘 안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시=오바마=이명박’이란 등식을 만들어 ‘대북정책 수정 불필요’를 주장한다. 한·미관계만 잘되면 북·미관계도, 남북관계도 다 잘 된다는 이명박의 인식 때문이다. 이를 이명박 가설이라고 해두자. 입증할 수 있을까.

한·미관계는 이명박이 부시 때보다 더 협력할 거라고 하니 일단 믿기로 하자. 한·미 공조의 결과로 남북관계도 잘 풀려 나갈 것이라는 논리는 어떨까.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수정 불가이므로, 이 논리가 실현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오바마가 김정일에게 압력을 넣어 남북관계 개선을 강제하는 경우뿐이다. 그러나 그게 성공할지 불확실하고, 성공한다 해도 마지못해 하는 그런 관계는 낡지도 않고 지속성도 없다. 김영삼 때 이미 경험했다. 북한도 북핵문제 및 북·미관계가 잘 풀린다면, 남북관계에 아쉬워할 게 별로 없다. 미국의 쌀 지원은 계속되고, 남

한이 북한을 자극하는 상황이라면 더 말할 나위없다. 더욱이 이 가설은 오류이다. 남북관계의 진전은 줄기찬 대화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실이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아랑곳없이 대북공세에 열중이다. 도발할 태면 해보라는 기세다. 북한에 쌀 한 톨 준 적 없고, 이산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이명박이 오로지 인도주의 정신으로 그랬을 것 같지도 않다. 오락가락하지 말고 북한에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는 극성 보수를 달래는 기회로 여겼던 것 같다. 참으로 여유 있는 자세이다.

몇 가지가 떠오르는 것들은 있다. 오바마가 나서도 어차피 북핵 진전은 안 될 것이라는 신포도론. ‘우리가 안 움직이면 모든 게 제자리결음할 것’이라는 과대망상. 결국은 북한이 항복하거나 양보할 것이라는 기대. 군사분계선 통제, 남북 직통전화 단절을 발표했지만 개성공단 중단은 안할 것이라는 믿음.

이런 걸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 쉬운 말로 운에 맡긴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의 안보, 우리의 평화는 지금 이렇게 운에 맡겨져 있다.

(이 글은 『경향신문』 11월 13일자에 실린 것으로, 원문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121807595&code=990339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北 리근 파견은 보다높은 차원 협상 용의”<北대변 조선신보>

-- 11월 10일 연합뉴스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된 시점에 뉴욕을 방문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의 사태 진전을 토대로 “미국측과 보다 높은 차원에서” 현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0일 주장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조미 현안 해결, 오바마 새 정권의 과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이 큰 정치로 변혁의 흐름을 주도한 실적”이 있다고 상기시키며, 오바마 당선인측에 대해 “관례화된 악습(대북 압력)을 답습하여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정권 출범 초기부터 독자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나갈 필요”를 제기했다.

신문은 그러나 오바마 당선인이 적대국 지도자와 대화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 것이 “조선(북한)의 ‘선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과거의 오만한 미국식 외교와 다를 바 없다”며 대북 외교 변혁의 우선순위에 ‘적대시 정책’의 전환을 둘 것을 주장하고 “미국이 변하면 조선도 호응할 것이며, 새로운 조미관계의 구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개성지역 민간교류는 ‘정상 진행’

-- 11월 10일 연합뉴스

북한은 개성공단에 군부 조사단을 보내는 등 대남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서 민간교류는 외관상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이하 연탄나눔운동)’은 11일 전라남도 강진군이 지원한 쌀 40t과 함께 연탄 5만장을 10대의 트럭에 나눠 싣고 개성지역 주민들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이달 초 개성에 있는 고려 궁성유적인 ‘만월대’에 대한 제3차 남북공동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의 남북관광사업단 관계자는 “초창기 개성관광 때보다 평일 방문 인원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관광 자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고, 현대아산측은 “하루 300명 내외의 인원이 관광길에 오르고 있다”며 “관광코스나 북측의 태도 등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단내 공장들의 조업도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명만 중소기업진흥공단 남북협력지원실장은 “입주기업들이 시험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북측에서 필요 인원을 수시로 파악해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문창섭 개성공단기업협의회회장은 “지금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작업에 지장을 받은 적은 없다”며 “인력수급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대략 1천여명씩 선발,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북측에서 기숙사나 탁아소 건설을 꾸준히 요청하는 등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일부 단체의 빠라(전단) 북송에 강력하게 자제 요청을 하고 공단에 인프라를 제공하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北, 남북경협 창구 축소 개편

-- 11월 11일 동아일보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총괄하는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를 민족경제연합회(민경련)로 축소 개편하고 소속도 내각에서 당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0일 “북한은 기존 민경협 내 일부 조직을 민경련 산하 대외사업국으로 통폐합해 중국 등과의 해외 경제사업에 투입했으며 민경련에 당 소속 인력을 대거 배치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북경협 기업인 안동대마방직이 기업인들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을 때 과거 북측 최고위 인사로 환송 환영 만찬 등을 주재했던 김성일 민경협 부위원장이 일절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북한은 남북경협 사업이 늘어나자 2004년 7월 당 소속이던 민경련 등 관련 조직을 통합해 내각 산하에 민경협을 만들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북한이 대남 경협 조직을 축소 개편한 것은 남북 경협의 축소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경련을 내각이 아닌 당 소속으로 복귀시킨 것은 남북 경협을 ‘경제원칙’이 아닌 ‘정치원칙’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내년 미국서 대규모 ‘북한 미술 전시회’ 열린다

-- 11월 11일 노컷뉴스

북한 현대 미술 특별 전시회가 내년에 미국의 유명 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는 네덜란드인 사업가이자 북한 미술 수집가인 프란치스쿠 브뢰르센 씨는 “뉴욕의 유명 미술관 두 곳과 워싱턴의 국립 미술관 한 곳이 자신의 북한 현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서 말했다.

브뢰르센 씨는 “해당 미술관 관계자들이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현대 미술품들의 예술성과 독

창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내년 후반기에 북한의 작품들이 미국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 선보이게 될 북한의 현대 미술품은 주로 산수화와 민속화 등 회화로 김성희, 정창모, 문화춘 등 북한의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을 비롯해 북한 내 최고 예술가들의 작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르센 씨는 앞서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의 국립 미술관에서 주최했던 북한의 현대 미술 전시회가 관람객들의 요청으로 연장 전시 됐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트레차코프 국립 미술관에서도 북한의 미술품들이 전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 거점으로 北 광역경제권 개발

-- 11월 11일 매일경제

10일 통일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사가 후원하는 ‘한반도 경제 전망과 남북관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남북 대화 채널 재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북 포용 성향을 보이는 오바마 당선자가 북미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장달중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 오바마 정부는 지금보다 대북정책을 더욱 포용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북미 직접대화가 활성화될 때 우리가 미국 정책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우리 정부가 대북 압박정책을 고집한다면 한·미 간 갈등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북한이 새 정부 길들이기에 나서고 우리는 이런 북한을 무시하면서 상호간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 막혀 있다”며 “상호간의 접점을 찾아서 대화를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前장관 “개성공단 중단대책 세워야”

-- 11월 11일 연합뉴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11일 북한 군부가 최근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과 관련, “북한이 개성공단내 일부 기업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평화방송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개성공단 관련 북한 군부의 움직임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냥 무시한다면 (북측이) 꺼낸 칼을 그냥 칼집에 넣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저쪽(북한)에서 잘 하는 표현으로 ‘우리

는 빈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빈말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며 “희망적인 관측과 실제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책은 별개로 생각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가 전면에서 나서 남북 관계를 관리하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북한군 김영철 중장의 개성공단 ‘철수’ 발언은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심리전”이라고 분석했다.

프리처드 “북핵, 오바마 정부 우선 순위서 밀려”

-- 11월 11일 연합뉴스

미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초기에 미 국무부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0일 차기 오바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우선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북핵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으로 내다봤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날 워싱턴 D.C.의 KEI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중요한 보직이 채워지려면 전례에 비추어 대통령 취임 후 3-4개월이 소요된다”며 “북핵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당장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런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 초기에 대북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을 낮게 전망하면서 “오히려 성 김 국무부 대북특사와 같은 공직에 있는 사람을 유임시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기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있어 잃어버린 고리를 찾으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제2차 핵 위기 발생 경위 및 북-시리아 핵확산 커넥션을 엄중히 들여다 볼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차기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도 점검하면서 과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비핵화 3단계로 계속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좀더 빠르고 나은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그러나 북핵문제의 해결을 계속 지연시키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오바마 정부는 북핵관련 라인이 새롭게 구축되는 대로 이를 신속히 매듭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北신문 “日, 6자회담 참가명분 희미”

-- 11월 11일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 재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11일 북한으로서는 “회담의 진전에 장애로 되는 일본을 조선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제외

하자고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신문은 ‘논리적 사고능력이 마비된 자들의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납치문제를 걸고 대북 에네르기(에너지) 지원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한는데, 그 경우 일본의 6자회담 참가 명분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논문과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다모가미 도시오 전 항공막료장에 대해 “정신이 나간 자의 낫두리”라고 비난하며 “일본 사회가 군국주의 독소에 깊숙이 중독돼 있다”고 말했다.

“남북통합지수 작년 최고, 남북협력 도약기”

-- 11월 11일 연합뉴스

“지난해 남북통합지수(IKII)는 1천점 만점에 272.7점, 즉 27.3%로 경제, 정치, 사회문화 세 영역에 걸쳐 ‘남북협력 도약기’인 남북통합 3단계에 처음 진입.”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는 2년여의 연구를 거쳐 개발한 남북통합지수를 11일 이같이 발표하고 1989년 이래 통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시기마다 영역별로 지수의 부침이 있었으나 지난해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1992년 정치 통합지수가 잠깐 급상승한 적이 있지만,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 이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영역 전반에서 통합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경색을 감안하면, 남북통합지수는 2007년을 정점으로 하강 포물선을 그으며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통합지수는 “법적, 제도적, 관계적 통합을 포함해 남북관계의 진전이 통합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남북교류 통계자료와 전문가 조사, 남한 주민 및 탈북자의 통일인식 조사 등을 바탕으로 개발했으며 사회문화, 정치, 경제 통합지수를 낸 가로축과, 의식, 관계적, 제도적 통합지수를 산출한 세로축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회문화 99.6점(340점 만점), 정치 94.3점(330점 만점), 경제 78.8점(330점 만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로축에선 ‘의식 통합지수’ 124.2점(250점 만점), ‘관계적 통합지수’ 122.2점(480점 만점), ‘제도적 통합지수’ 26.3점(270점 만점)으로 의식 면의 통합지수가 가장 높았다. 경제분야 통합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경제 영역의 경우 실질적인 통합이 정치적 통일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연구소측은 설명했다.

연구소는 “정치, 경제 영역은 2007년 이전에도 3단계에 진입한 적이 있으나 사회문화 영역을 포함한 세 영역 모두 3단계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라며 “남북통합 수준은 남북관계 초기의 접촉, 교류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질적 전환을 수행하는 도약의 과정에 있다”고 주장했다.

金통일 “개성공단 반드시 활성화할 것”

-- 11월 12일 연합뉴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11일 “개성공단은 반드시 활성화시켜나가고 잘해나갈 것”이라며 “예산도 마련해 놓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2009년도 통일부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서 “미북관계가 진전되고 북핵 불능화가 잘 되면 기숙사나 (공단 주변 진입) 도로도 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히고 “개성공단에 관한 정부의 태도나 의도를 의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희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절대 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에 개성공단 숙소 건설비로 230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출퇴근 도로 조성비는 여유자금에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김 장관은 소개했다.

김 장관은 “작년에 (도로 건설비를) 220억 원으로 판단했는데 이보다는 적은 액수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개성공단 2단계는 2010년에 가 봐야 하며 내년에 불능화 작업 및 핵폐기 로드맵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엔벤 대북무역 83% 증가

-- 11월 12일 연합뉴스

중국 엔벤(延邊)조선족자치주의 대북무역이 올해 들어 9월까지 크게 증가했다.

중국 동포신문인 연변일보는 11일 “금융위기로 인한 대외무역수출이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엔벤 조선족자치주)의 대 조선(북한)무역이 계속 성장했다고 주정부가 밝혔다”고 전했다.

신문은 “통계에 따르면 9월까지 우리 주의 대 조선 수출입무역액이 3억3천432만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지난해 동시기에 비해 82.72% 증가한 것”이라며 “그중 수출액이 1억5천971만달러에 달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동시기에 비해 47.1% 증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상대적으로 수입액도 증가해 9월까지 수입액은 1억7천462만달러에 달해 지난해 동시기에 비해 134.7% 증가하였다”며 “이는 7월 전에 강재, 철광분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높은 폭으로 인상하면서 비록 수입된 원자재 수량은 적으나 시장가격 인상으로 인한 원자재 판매수입총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하지만 7월이 지나면서 강재, 철광 분 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수출입에서 결손을 초래하는 현상도 존재하고 있어 금후 우리 주의 대 조선 무역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들, 대정부 건의 움직임

-- 11월 12일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한 대남 압박을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 숨죽이고 있던 입주기업들이 목소리를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김영철 중장 등 북한 군부 관계자들이 지난 6일 현지조사를 명목으로 개성공단을 방문, 공장 철수 등을 언급함에 따라 30여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11일 “당시 회의에서 기업들은 민간단체의 빠라 살포를 중단시켜줄 것과 근로자 수급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유사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면서 “13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이런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은 일단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대남압박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을 가능케하는 측면이 있다. 80여개 입주기업들의 ‘아우성’이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북측의 의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도를 모르지 않음에도 입주 기업들의 입장은 실제로 절박하다. 가뜰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일부 기존 입주업체들은 주문 취소 등 피해를 보고 있고, 공장을 짓고 있는 입주 예정기업들은 ‘진퇴양난’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北-미얀마 비자면제 협정 체결

-- 11월 12일 연합뉴스

북한과 미얀마 정부는 외교와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해 서로 입국사증(비자)을 면제해줄기로 합의했다고 국영신문인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가 11일 보도했다. 상호 비자면제 협정은 김영일 북한 외무성 부상이 6~10일 닷새간의 일정으로 미얀마를 방문한 길에 체결됐다.

보도에 따르면 김 부상은 이번 방문에서 미얀마 군사정부의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평화개발평의회’(SPDC)의 티하투라 틴 아웅 민트 우 제1서기, 니안 윈 외무장관 등을 면담했다. 특히 김 부상은 키아우 투 미얀마 외무

차관과 회담을 하고 양국 우호 증진과 함께 영사 업무와 무역·경제·기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북한과 미얀마는 지난 1975년 수교했지만 1983년 10월 발생한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해 단교했다가 작년 4월 다시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北군부 “12월1일부터 분계선통과 엄격 제한, 차단”

-- 11월 12일 연합뉴스

북한군은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MDL)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 김영철 단장은 12일 남측 군당국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1차적으로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는 우리 군대의 실제적인 중대조치가 단행된다는 것을 정식으로 통고한다”고 밝혔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했다.

통지문은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군부를 비롯한 남조선 괴뢰 당국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위협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하고, 남한 정부에 대해 “현 북남관계가 전면차단이라는 중대기로에 놓여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이 육로통행의 ‘전면 차단’이 아닌 ‘엄격 제한, 차단’ 조치라고 밝힘에 따라 당장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등의 출입이 전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남측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조치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통지문 명의자인 김영철 단장은 지난 6일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실장 직함을 가지고 북한 군부 조사단 6명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 입주 업체 및 기반 시설들에 대한 실사하면서 입주 업체가 “철수하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비상...‘최악의 상황’도 배제 못해

-- 11월 12일 연합뉴스

북한군이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할 것이라고 표명하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 사이에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관계자는 “북한군에서 공장 철수와 육로통행 차단 등을 운운해 입주기업인들 사이에서 개성공단 철수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1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공단 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보험약정에 따라 설비투자 일부를 보전받지만 이는 (대출받은) 은행으로 다 들어갈 것이고 제때 납품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발주처에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다 도산할 것"이라며 "13일 김하중 통일부 장관과 면담에서 유사시 기업들의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때 합의사항인 '3통(通) 문제'가 난항을 겪고 북측 근로자 기숙사 건설이 지지부진해지자 노심초사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이 '빠라' 살포 등을 문제 삼아 개성공단 사업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김영철 중장 등 북한 군부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해 공장 철수 등을 언급함에 따라 입주기업인들 사이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아직 남측 근로자의 왕래를 통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현재 상태로 보면 북측이 말한 대로 통행을 제한할 것으로 입주기업인들은 보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필 "MB, 남북대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

-- 11월 13일 노컷뉴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남북관계가 또다시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대화 제안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경제속손실을 감수하면서 개성공단을 위협하고 있는 이면에는 북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나 당국자들은 남북대화의 필요성을 선언적으로 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 문제, 대북 식량지원 등 가시적 액션은 전혀 취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심지어 "북한은 공식적인 회담을 한 번 제의한 바 있으나, 오히려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남북회담을 제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북측을 굴복시키겠다는 강경 자세도 아니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선언도 아니다"면서 "공식적인 남북회담 제안과 구체적인 행동이 일치되는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32만달러 상당 식량 북한에 지원"

-- 11월 13일 노컷뉴스

이탈리아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이 북한에 25만 유

로, 미화로 약 32만 달러 규모의 곡물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이탈리아 개발협력청의 알렉산드로 가우디아노 아시아 담당자는 "이번 식량 지원은 북한에 대한 '상호 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 곡물은 내년 상반기쯤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지난 2003년 북한과 '상호 식량 지원 프로그램'을 합의한 이후 매년 많게는 3백만 유로에서 적게는 1백만 유로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직접 지원해 올해는 지난 4월, 1백만 유로 상당의 밀가루 2천 6백여 톤을 북한에 전달했다.

"남북경색 해법은 경제교류"<현대면 설문>

-- 11월 13일 연합뉴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풀려면 금강산 관광과 경제협력 사업 등 경제교류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전국의 만 19세 이상 1천17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 남북 경색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가장 많은 35.8%가 '경제 분야의 적극적인 교류'를 꼽았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25.1%는 '당국 간 조건 없는 대화'를 선택했고 이어 '적극적인 민간교류 지원'(14.5%)과 '대북특사 파견'(8.3%),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8.1%) 순이었다.

남북 경색이 장기화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는 '북한의 무력도발 등 한반도의 긴장고조'(30.6%)가 꼽혔다. 북미 대화, 6자회담 등에서 한국이 소외(24.8%)되거나 북한의 체제 변화 때 우리의 역할이 축소(15.2%)될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는 73.1%가 '관심있다'고 답변했으나 20대 이하에서는 관심있다는 응답이 55.2%로 30대(71.7%)와 40대(79.7%), 50대 이상(80.6%)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았다.

통일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겠다'(30.4%)와 '연간 1만원 이하'(24.0%)라는 답변이 많아 통일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달리 정작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통일 자체에는 다소 비판적인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의 50.3%는 '지금보다 경제교류가 활성화되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수준에 만족한다'는 견해였고 '완전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답변은 26.9%에 그쳤다. 통일 시기에 대해서도 '10년은 넘어야 한다'(61.1%) 또는 '아예 불가능하다'(22.8%)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급격히 냉각된 남북관계는 '어떤 형태이든 경색을 풀어야 한다'(50.2%)는 응답과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양보하면서까지 풀 필요는 없

다(49.8%)는 강경론이 팽팽히 맞섰다. 내년 남북관계 전망에는 낙관론(52.6%)과 비관론(47.4%)이 비슷했다.

靑 “북한, 통미봉남은 착각”...남북관계 경색국면

-- 11월 13일 노컷뉴스

남과 북의 기세싸움이 계속 이어지면서 남북관계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북측은 강경책으로 남측을 압박하고 남측은 대화를 거론하면서도 먼저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남북관계가 조기에 호전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12일 북한의 통행 통신제한 조치에 유감을 표시했던 우리 정부는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거론하면서도 직접 대화를 제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대북정책과 관련해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은 북한에 있는 만큼 북측이 먼저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청와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이번 조치가 '통미봉남'이란 대남전략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3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도 북한이 상황의 수위를 높여가는 것과 관련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통미봉남이 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통상적인 그런 전략이라면 그것은 착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기류는 정부가 전날 “북한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현실적인 기초 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추가하락으로 이미 날라간 회사도 있다”

-- 11월 13일 데일리서프라이즈

유창근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유창근 부회장은 13일 북한이 휴전선 통행을 엄격 제한키로 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기업들은 거래처로부터 바로 지금 거래주문 취소라든가, 주재원들이 불안감을 갖고서 지금 아주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성공단에는 현재 88개사가 들어가 있고, 45개사가 (입주를) 준비중이어서 한 130개 기업이 들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 거래처들로부터 주문이 전원 취소한 데도 있고 50% 이상씩 떨어진 데도 있고 추가하락으로 인해 이미 날라간 회사들도 있어 상당히 심각하다”고 덧

붙였다.

유 부회장은 “이것(군부의 조치)은 단순히 경고용이 아니라 일종의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한다는 느낌”이라면서 “우리가 계속 남쪽의 비방선전물을 중단 좀 해달라고 그랬었는데...”라며 탈북자 단체에 불만을 표시했다.

유 부회장은 “우리가 너무 안일한 대처했던 것 같다”면서 “처음에 좀 더 신뢰를 구축했다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설마설마 했던 것이 이 상황까지 만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개성공단 철수가 가져올 파장과 관련해 유 부회장은 “손실보조제도가 있지만 기업은 그 전에 이미 거래관계가 중단되면 이미 부도가 나가나 도산돼 버린다. 그래서 손실보험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사람 죽고 난 다음에 보험 타는 거랑 똑같다”고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그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장담한데 대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그때 우리가 도움이 안 되는 말들 때문에 남북관계는 결국은 불필요한 사람들이 하는 소모적 말이 너무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정부, 대북지원단체에 기금 지원 재개 방침

-- 11월 14일 노컷뉴스

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이후 보류해온 인도적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14일 민간 단체들이 추진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10억원대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현재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사실상 보류시켜왔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북한이 육로 통행 제한을 예고하기 이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사실상 금강산 사건에 연계했던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인도적 지원단체 지원 뿐 아니라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과 최근 북한의 대남 압박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먹는 문제 해결은 중대 정치사업” <北 조선중앙방송>

-- 11월 14일 노컷뉴스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14일 식량문제는 북한의 현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본 고리”인 만큼 이 먹는 문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기 위한 중대한 정치

적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독려했다.

방송은 "우리에게는 일심단결이 있고 강력한 군력이 마련돼 있는" 만큼 "식량문제, 먹는 문제만 풀리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식량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사업인 이유에 대해 방송은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위력을 높이 떨치"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간직하고 힘차게 싸워나가"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해, 먹는 문제가 김정일 체제와 사회주의 이념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대북진출 오라스콤, 노키아와 협력 계약"< RFA >

-- 11월 14일 연합뉴스

대북 사업을 벌이는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 텔레콤이 지난달 27일 세계적인 통신회사인 핀란드의 노키아와 협력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라스콤 텔레콤이 준비하고 있는 북한의 휴대전화 사업에 노키아가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했다.

노키아는 앞으로 오라스콤에 음악과 동영상, 네비게이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오라스콤측은 "노키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점진적으로 오라스콤사가 진출한 나라의 모든 오라스콤 소비자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노키아측은 오라스콤을 통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직 공식 발표는 없다"면서도 노키아가 오라스콤에 각종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노키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당연히 노키아가 제공하는 음악이나 동영상이 북한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오라스콤은 지난 5월 북한에서 음성 시험에 성공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식 개통을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개통 일시는 일체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방송은 덧붙였다.

UNDP, 北과 사업재개 방안 논의

-- 11월 14일 연합뉴스

유엔개발계획(UNDP)이 대북사업을 재개하는 방안을 북한측과 본격 논의하고 있으며, 내년 1월 UNDP 이사회의 승인이 날 경우 상반기중 평양사무소가 다시 설치돼 대북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UNDP 뉴욕본부의 크리스티나 로니그로 공보관은 이 방송과 인터뷰에서 UNDP 실무진이 일주일간 평양을 방

문해 대북사업의 방법과 내용에 대해 북측과 협의하고 지난 주말 미국으로 귀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현재 북한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포괄적 방안'(a package of measure)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관계자들은 지난 9월 열린 UNDP 집행이사회의 비공식 회의에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사국이 UNDP의 사업계획안을 지지했고, 대북 사업의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했던 미국과 일본도 반대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1월 집행이사회에서 대북사업 재개가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UNDP는 지난 1981년부터 농경지 복구, 인적자원 개발, 경제개혁 지원 등 다양한 대북 지원사업을 벌여오다 작년 미국측의 자금전용 의혹 제기로 지난해 3월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5월에는 북한사무소도 폐쇄했다.

北 개성공단 폐쇄땀 국제신용 추락...외국인투자 완전 끊겨

-- 11월 14일 동아일보

북한 군부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앞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무리수를 둘 경우 남과 북은 상당한 정치·경제적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조성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한국 측은 경제적 부담이, 향후 국제사회의 신용을 잃게 될 북한은 정치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측이 입을 경제적 손실은 정부와 민간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먼저 정부는 개성공단 조성 등에 투자한 남북협력기금 등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

13일 통일부가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에게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토지공사에 시행한 개성공단 내부기반시설 공사에 남북협력기금 1265억 원을 무상 지원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위탁 경영하는 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와 기술교육센터 건설 공사(진행중)에 각각 254억 원과 198억 원을 지원했다.

한전과 KT는 전력과 통신 설비공사에 각각 469억 원과 71억 원을 투자했다. 이 중 370억 원과 57억 원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빌린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9월 말 현재 입주기업 28곳에 760억 원을 대출해줬다. 공단이 멈춰 기업들이 손해를 보면 90%까지 손실보전을 해줘야 한다. 통일부의 '통일백서 2008'에 따르면 입주기업들은 지난해 말 현재 토지분양대금, 공장건립비, 시설투자비 등으로 36개 기업이 평균 52억 원을 투자했다.

이처럼 현재까지 파악된 정부 투자 및 대출액만도 모두 3000억 원에 이르고 입주기업들의 실제 투자는 제대

로 파악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 만큼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료채취 둘러싼 진실게임...北 노림수는

-- 11월 14일 연합뉴스

정부 소식통은 14일 이른바 시료채취(sampling)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북한의 의지와 연결해서 분석했다.

북한이 핵폐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시료채취를 거부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은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강조했다.

1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1992년부터 북한 핵시설을 사찰하면서 영변 5MW 원자로에서 꺼낸 연료봉의 재처리를 통해 얻어낸 플루토늄 추출량을 놓고 북한과 첨예하게 맞섰다.

북한은 당시 80g에 불과한 미미한 양의 플루토늄만 추출했다고 신고했으나 IAEA와 미국은 적어도 kg단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자 IAEA는 1993년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의문의 미신고 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하기로 했다.

미신고 시설은 바로 폐기물 저장소로, IAEA는 이곳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하면 마치 나무의 나이테를 보듯 북한이 언제부터 몇 차례에 걸쳐 재처리를 했으며 이를 통해 얼마나 많은 플루토늄을 추출했는지를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당시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IAEA의 접근을 철저하게 차단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제1차 핵위기가 발발했다. 결국 시료채취가 핵위기를 촉발한 것이고 그런 상황이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2일 담화에서 미국과 합의한 검증 방법을 '현장방문, 문건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미국이 발표한 것과는 크게 다른 내용이다. 당시 미 국무부는 '샘플링과 법의학적 활동을 포함해 과학적인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밝힌 내용에는 시료채취라는 대목이 없을 뿐 아니라 핵시설에 대한 접근도 '현장방문'이라고 표현했다. 주인의 허락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진다.

결국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목표가 달성되자 다시 진실의 문을 닫으려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남북 한파에 민간협력 공공

-- 11월 16일 한겨레신문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민간 교류·협력 사업에도 한파가 덮쳤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교류·협력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는가 하면,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 대한 외국 구매자들의 상품 주문까지 취소되고 있다.

충북 제천시시는 2004년 북한 고성군 삼일포에 5만㎡ 규모로 사과·복숭아 과수원을 조성하고 해마다 9월에 '금강산 사과 축제'를 열어왔지만 올해는 무산됐다. 제천시는 지난 9월24~26일 축제를 열기로 북한 고성군과 합의하고 초청장도 받았지만, 냉랭한 남북관계 탓에 결국 가지 못했다. 경기도의 대표적 남북 교류협력 사업인 평양 당곡리 벼농사 협력사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북한의 내부 사정으로 올해 초 중자 지원만 한 뒤 현재까지 평양을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근 군사분계선 통제가 강화되고 남북의 직통전화가 단절되는 등 상황이 악화하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과 관광업체들은 심각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 안영욱 팀장은 "계속 남북관계가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 외국 구매자들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고 있다. 구매자들이 개성으로부터는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계속 악화하면서 정부의 적극적 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성 육로관광업체인 두레평화관광 이영신 사장은 "개성관광과 공단이 막히면 남북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며 "전 정부에서 이미 결정된 식량 지원 등 북쪽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이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나진 北 정기화물선 '정상운항 중'

-- 11월 17일 노컷뉴스

북한군이 다음달 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해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부산과 나진항을 오가는 북한국적 화물선 '단결봉호'는 정상 운항되고 있다. 17일 부산항만공사(BPA)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부산항에 첫 입항했던 북한국적 정기 화물선 단결봉호(1천592t)는 요즘도 부산 감천항과 북한 나진항을 열흘 간격으로 오가고 있다.

단결봉호는 올해에만 21차례 부산항과 나진항을 오갔으며 북한에서 부산으로 올 때는 냉동어류와 고사리, 버섯 등 500여t을 싣고 오고 부산항에서 북한으로 출항할 때는 폐비닐을 싣고 가는 경우가 많다.

단결봉호의 대리점인 국보해운 측은 "군사분계선을 통

한 육로 통행 제한 발표로 남북관계가 얼어붙어 있지만 아직 북측으로부터 단결봉호의 운항과 관련해 특별한 조치는 없었다"라고 밝혔다.

Military ties will not solve Korean issue

(한미)군사동맹의 강화로는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없다

-- 11월 13일 UPI Asia

출처:http://www.upiasia.com/Security/2008/11/13/military_ties_will_not_solve_korean_issue/3003/

A panel of Korea experts and scholars met in Seoul, South Korea, last week to discuss the way forward to bring peace and stability to the Korean peninsula.

Among the panelists was Dr. Victor Cha, former director of Asian Affairs of the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whose speech on the necessity of the U.S.-South Korea alliance aroused considerable discussion and exposed great differences among the participants' views.

Cha pointed out that the U.S.-Korea relationship had no historical roots, beginning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in the interest of securing the peninsula. Yet he argued, "The U.S.-ROK alliance remains one of the most underrated" alliances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

지난 주 서울에서 한반도 전문가와 학자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다. 논자 중 전임 미국 NSC director 빅터 차 박사는 한미군사동맹의 의미와 시각에 있어 논란을 일으켰다. 차 박사는 한미동맹이 과소평가 되어있으나, 한미관계의 근간이며, 한국의 민주화, 6자회담의 실효성 제고, 한미FTA 등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4가지 당면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일방적인 한미 동맹에 기반한 차 박사의 해법은 결코 한반도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군사 동맹의 방법이 아닌 다자간 회의와 지역내 FTA 등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N.Korean military tells S.Korean managers to move factories out of border city

북한 측 군부에서 개성공단 남측의 관리자들에게 개성에서 공장을 빼라고 말했다

-- 11월 14일 China Post

출처:<http://www.chinapost.com.tw/asia/korea/2008/11/14/183237/N.Korean-military.htm>

North Korean military officials told South Korean business managers to move their factories out of the North, a report said Friday - a strong sign the regime is serious about shutting down the border in a further deterioration of inter-Korean ties.

The high-level military delegation made the comments during a rare inspection of a joint industrial park in Kaesong last week, South Korea's Chosun Ilbo newspaper reported.

The newspaper quoted a South Korean businessman with a factory in Kaesong who met with government officials Thursday, a day after the North said it would shut its side of the border on Dec. 1.

.....

지난 주 북한 군부에서 개성공단 시찰 중 남한 측 공장 관리자들에게 공장을 북한 지역에서 빼라고 언급했다고 남한의 조선일보가 전했다. 이는 북 정권이 향후 남북 관계의 악화 시 국경폐쇄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한 측은 남북관계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北の指定解除「中東のテロリスト支援」と米議회가報告書
미 의회 보고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는 '중동의 테러리스트 지원'

-- 11월 13일 요미우리신문

출처:<http://www.yomiuri.co.jp/feature/20080115-899562/news/20081113-OYT1T00406.htm>

米国が北朝鮮に対するテロ支援国指定を解除したことについて、米議会調査局が、「平壤(金正日政権)が中東のテロリストグループやテロ支援国家への支援を継続または拡大するように奨励することになる」と批判する報告書を作成、議事に配布したことが12日、わかった。

報告書は6日付。報道などにに基づき、米国がテロ支援国家に指定するイランの核弾頭開発に北朝鮮が技術協力していることや、国際テロ組織に指定するレバノンのイスラム教シーア派組織ヒズボラなどへの軍事支援を継続していると指摘。そのうえで、「米国が今後、北朝鮮の中東での活動に対処しようと思っても、もはや交渉のてこがない」として、指定解除によってこうした活動が黙認され、北朝鮮の中東での活動への抑止力がなくなるとした。

.....

미 의회 조사국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평양(김정일 정권)이 중동의 테러리스트 그룹이나 테러지원국에 지원을 계속 또는 확대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 의회에 배포했던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테러지원국인 이란의 핵 개발에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테러단체인 레바논의 이슬람교 시아파 조직 헤zbollah 등에 군사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 보고서 작성자인 앨라니크슈는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 개발을 이란에 위탁 할 생각이며, 그렇게 되면, 북한이 핵 불능화를 해도 핵개발의 새길이 생긴다'라고 말해 테러지원국 해제가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추천 논문

수산분야 남북 협력 및 투자 진출 방향

홍성걸(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수산분야 남북협력의 경우 경험 초기부터 민간 교역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지만 실제의 성과는 크지 않았다.

북측 수역 어로 작업의 경우, 사전에 수역에 대한 경제성과 조업 용이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원의 신분보장과 선박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해난 사고에 대비한 대피, 구조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제3국의 불법조업 퇴출에 대해서도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 2007년 12월 제1차 농수산협력분과위에서 남측은 입어전 공동어장조사를 요구한 반면 북측은 자체 조사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했으며, 제3국(=중국) 불법조업과 관련해서도 남측과 중국이 동일어장에서 조업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북측 내부의 문제이므로 논의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북측 수역 어로 작업의 경우, 어종이 대부분 회유성이므로 남측 어민의 이해와 직결될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회유성 어종의 사전 어획을 이유로 남측 어민이 반대하여 통일부가 사업 승인을 불허한 사례가 적지 않다.

유통가공산업의 경우, 북측이 제한적 개방과 인적 교류 접촉 제한을 하고 있는 점, 인프라와 원부자재가 대단히 부족하며, 행정 서비스도 취약하다는 점, 이에 따라 사업의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점 등 여타 제조업과 유사한 조건임을 감안해야 한다.

제1차 농수산협력분과위 논의를 보면 남측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육로수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보장

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육로수송 보장 문제는 농수산협력분과 단위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남북은 동해와 서해 어장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우량 품종 공동개발 등 자원관리를 통한 과학기술협력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 수출 비중이 높은 북한의 경우 수산양식분야의 기술발전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차 농수산협력분과위에서 남북은 우량 품종 개발을 위한 종묘배양장 건립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2008년 상반기 현지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외에 제3국 어장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북측이 소진하지 못한 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 분야는 타 부문에 비해 저렴한 투자로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이므로 종합적 시각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1단계에서는 남북 수산협력의 마스터플랜을 세워 각 단계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추진할 주체로 남북 수산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단계에서는 북측에 취약한 수산업 인프라를 확충함과 함께 수산기술 인력교환과 공동 연구 등을 실시하며, 해외 어장 진출에 협력한다.

3단계에서는 수산분야 공동 D/B와 수산자원 공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적, 인적, 기술적 교류 등 협력 사업을 확대하여 기능적, 구조적으로 협력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이 글은 2008년 11월 12일 통일농수산사업단 등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북한, 노동신문 ‘남북대화 이뤄지려면 분위기 마련돼야’ 주장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5일 이명박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촉구에 대해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북남대화가 이뤄지려면 우선 그에 필요한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침전쟁연습은 평화위협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설에서 연합해병대 상륙 훈련인 ‘호국훈련’(10.30~11.8) 등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거론, “북침 전쟁연습은 우리 민족의 통일위협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북남 대결자세가 그 어느 정권보다 호전적”이라며 “이번에도 우리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대규모 ‘호국’ 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함으로써 가뜩이나 긴장된 정세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위기에 몰아넣었다”고 비난했다.